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2019. 12.

재정·시설분과위원회

## 1. 재정·시설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 1) 검토 안건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

### 2) 검토 결과 : 검토 완료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 인정

## 2. 검토 배경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차량규칙**'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주로 기초로 하여 제정<sup>1)</sup>되었으나, 공용차량 교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
- 공용차량 교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속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차량규칙과 관리규정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교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3. 차량규칙과 관리규정의 비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차량규칙)	공용차량 관리규정(관리규정)
제4조(차량의 교체) ① <u>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u> 차량을 신규차량	제7조(차량의 교체) ① <u>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u>

1)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정일은 1973.2.5.이고,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정일은 1982.12.2.임



<p>으로 교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량이 <u>별표2</u>에 규정된 <u>최단운행연한</u>을 경과하고 <u>최단주행거리를 초과</u>한 경우</li> <li>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u>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와 <u>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u>하는 경우</li> <li>3. 차량의 <u>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u>하고 같은 표에 따른 <u>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u>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u>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와 <u>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u>하는 경우</li> <li>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u>하고 <u>최단주행거리를 초과</u>하여 운행한 경우</li> <li>2. <u>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u></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각급 행정기관의 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u>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u>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li> <li>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u>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u>하고 같은 표에 따른 <u>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u>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u>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u>하는 경우. <u>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u></li> <li>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	---

**▣ 관리규정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7조 제1항, 제2항으로 나누고 있음**

- 2) 최단운행연한은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함(해당기간은 9년). 최단주행거리는 12만 km이상을 말하고, 이는 차량규칙과 관리규정이 동일함



- 관리규정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공용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 외 다른 제한이 없고, 제2항의 경우에는 각 호의 사유 외에 ①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는 점,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서식의 '교체승인요청'을 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차량규칙은 제4조 제1항에 차량교체 권한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체 기준을 제4조 제2항 각 호에 나열하고 있음**
  - 차량교체의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자체계획 또는 각급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차량 교체 결정할 수 있음
    -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 요청서를 받고 있음 ⇨ 규칙 개정 필요성 없음
  - 정수조정 규정 필요 여부 : 실무적으로 교체 여부에 관한 정책 결정 이후에 그에 따라 정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거의 동시에 이루어짐), 미리 정수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개정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 4. 차량규칙 개정 사항

### 가. 교체신청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를 통한 신뢰성 확보

#### ■ 문제점

- 차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차량 교체신청시 사고 여부 및 수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 **교체 신청시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필요성 긍정**
  - (-) 교체 신청시 첨부서류의 증가로 인한 업무 가중 예상
  - (+) 법원행정처에서 (교체 신청한) 차량의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현장 방문을 대체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



- (+) 실무상으로는 교체신청시 '수리비 내역서' 등을 첨부하고 있음 ⇨ 규칙과 실무 일치 필요
- (+) 행정안전부 관리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 차량규칙 개정(안)<sup>3)</sup>

##### 제4조(차량의 교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 ~ 4. <생략>

### 나. 노후차량의 경우 교체기준인 수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 ■ 문제점

- 차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노후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할 때 교체가 가능함 ⇨ 실무상 차량가격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의 잔존가치가 낮아짐에도 최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1/3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어야만 교체가 가능(예: 노후차량으로 실거래가격이 500만 원임에도 구입가격이 3,000만 원인 경우 수리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교체 가능)
- 교체기준이 엄격하여 교체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교체하기 어려운 현실임

#### ■ 교체 기준의 완화 필요성 ⇨ 긍정

- (+) 차량의 교체 여부는 교체 당시 실제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비를 판단하여 교체 여부를 심사함이 타당하고,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 (+) 다만,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2/3로 개정함이 바람직
- (+) 행정안전부 관리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3) 전체 개정안은 별첨



## ■ 차량규칙 개정(안)

### 제4조(차량의 교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 ~ 2. <생략>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신설>

4. <생략>

## 다. 운행연한을 기준으로 한 탄력적 교체기준안 마련

### ■ 문제점

- 차량규칙상 ①사고차량, ②노후차량, ③정부시책에 따른 경우 외에는 ④최단운행연한(9년) +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 교체가 가능함
- 따라서, 최단운행연한(9년)은 경과하였으나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하지 않은 차량 (또는 반대의 경우)의 경우에는 교체 근거가 없음

### ■ 최단운행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 공용차량이 오래되어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나 최단주행거리 요건(12만km)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체하지 못하는 불합리함 해소 ⇨ 탄력적 운용 가능
- (+) 최단주행거리(12만km)는 초과하지 않았으나, 운행연한이 10년을 넘을 경우에는 사고 가능성이 높고, 차량 유지·보수 비용도 커져 교체 필요성 인정됨
- (-) 최단주행거리(12만km) 미만인 차량의 교체 신청 증가 우려
- 그러나 공용차량의 배정 및 교체의 세부기준(가칭 ‘법원공용차량 교체기준표’)을 마련할 예정이고, 차량 배정안은 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문제의 소지는 낮음
- 행정안전부 관리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 차량규칙 개정(안)

### 제4조(차량의 교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설>

## 5. 차량규칙 개정 절차 일정표

### ■ 고려요소

- 차량 교체는 매년 1월에 각급 법원으로부터 신청받아 2월 ~ 3월경에 배정함
- 따라서 2020. 1. 개정이 완료되어야 신설된 규정에 근거하여 배정이 가능
- ⇨ 2020. 1. 개정 완료를 목표

### ■ 차량규칙 개정 절차 개관

- ① 재정시설분과위원회 규칙 개정안 검토 완료(2019. 11. 29.)
- ②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개정안 심의(2019. 12. 12.)
- ③ 입법예고 : 30일간 (2019. 12. 13. ~ 2020. 1. 11.)
- ④ 대법관회의 상정(2020. 1. 16.)
- ⑤ 대법관회의 의결 이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및 3~5일 이후 공포
- ⑥ 2020. 1. 넷째 주 개정 완료



## [별첨]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법원공용차량의 배정 및 교체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차량 교체  
차량 교체신청시 사고 여부 및 수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 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 수리비의 기준을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 공용차량의 사고위험성 감소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해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제2항제5호)

#### 4.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차량의 교체)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생략)	2. (현행과 동일)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	3. ----- ----- ----- ----- ----- -----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



---

<u>의 1을 초과하는 경우</u>  4. (생 략) <u>&lt;신 설&gt;</u>	<u>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u> <u>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u>  4. (현행과 동일) <u>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u> <u>경과한 경우</u>
---	--